

## [부처 2009 업무보고]

# 교육·연구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 교과부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학교·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 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저소

## 교육서비스 3만4천명·대학 연구소 인턴 8천여명

##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사립대 구조조정 가속화

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규모가 올해 7천 557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 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성 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 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14만 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 사립대학 퇴출=그동안 국·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내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예체능계나 전문계 학교의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소외계층 중심 '문화·체육 바우처, 사랑티켓' 제공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추진

## 문화부 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문화·체육·관광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화부는 내년 정책 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콘텐츠로 경제 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유통 활성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망 프로젝트'와 문화로 일자리 창출=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3월부터 1천35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36만 명에게 '문화·체육 바우처', 4천500명에게 '복지관광', 60만 명에게 '사랑티켓'을 제공해 문화체육 기회를 주며, 임대 아파트 등 소외지역에서 '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

기로 했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주도'=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 태스크포스를 구성, 5월까지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강사, 체육지도자와 스포츠 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9천508개,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천481개, 청년 인턴 채용으로 5천48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개발로 4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에 1천754억원을 투입해 모두 1만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년보다는 계획이다. 특히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들어 '예술 뉴딜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및 저작권보호 등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우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조합결

성을 조기 추진, 여기에 7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주도'=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분야 태스크포스를 구성, 5월까지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특화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문화부는 4대강 유역에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등 361개의 문화재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4대강 살리기를 위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년부터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4대강 유역에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고택과 텁풀스테이 등 고유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확충, 문화적 지역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여건에 맞는 수상·육상 레저시설의 가이드라인 수립, 테니스장과 과크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위기·협력·효율·일자리..."

## 青, 정부부처 달라진 업무보고 키워드 소개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2008년 연내로 앞당겨 밟으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미리 앞당겨 받은 것은이나 기능이 유사한 부처를 둘러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한 점, 장관의 일방적 보고가 아닌 심층토론을 겸한 보고를 유도했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28일 그간 5차례 있었던 업무보고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달라진 업무보고'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과거 업무보고는 연초에 시작해 3월 말까지 이어졌

어서 접촉하는 지방의 시청 및 구청 직원들의 의견을 전해 듣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경제회복과 연관성이 높은 공기업 34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이 역시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기', '협력', '효율', '일자리'라는 말을 2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통으로 당부한 말은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되 각 부처가 협력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의 첫 단추는 22개 부처의 화학적 결합이다" 등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



다.

내년 대규모 실직 사태 가능성 을 감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중산층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탈(脫) 위기 위한 신성장 동력도 이번 연설에 포함된다 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다만 아직 연설원고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상황 등이 유동적이어서 원고 내용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개각이나 청와대 진용 개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